

## 한국과 대만 경제에서의 同業者團體의 역할, 1950-1980\*

박 섭\*\*

### 논문 초록

1950-80년에 한국정부와 대만정부는 면제품의 가격안정, 증산, 수출쿼터 배정을 위해 동업자단체를 활용했다. 한국정부는 수출증대에도 동업자단체를 활용했다. 두 정부는 면제품의 가격을 규제했고 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면제품의 증산, 면제품 수요 동업자단체와 공급 동업자단체 사이의 직거래, 동업자단체에 의한 면제품의 공동판매 등을 지시했고 동업자단체는 그것을 이행했다. 한국정부는 면제품의 증산과 수출증대를 위해 생산량 책임제를 시행했다. 대한방직협회는 회원들의 의사를 모아 그것을 실현할 방책을 논의했고 실천했다. 대만정부는 증산을 위해 면화와 면사가 생산능력이 충분한 기업에만 배정되도록 紡織工業同業公會를 규제했다. 그런데 동업자단체를 이용하는 방법에 차이도 있었다. 수출쿼터나 원조면화 배정에서 잘 나타나듯이 한국정부는 동업자단체와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맺었으나, 대만정부는 정부의 역량이 닿는 곳은 모두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곳에서만 동업자단체의 협력을 얻었다.

핵심 주제어: 동업자단체, 대한방직협회, 대만성 방직공업동업공회, 수출쿼터제도, 경제정책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N8, O1

\*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KRF-2004-041-B00068) 이 글의 초고는 「동아시아 자본주의형성사」 합숙연구회 (제3회 서울 2004년 8월; 제4회 타이베이 2005년 2월), 한국지역사회학회 월례발표회 (부산, 2005년 5월), The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 Economic Association (서울, 2006년 8월)에서 발표되었다. 두 차례의 합숙을 지원한 가고시마 국제대학 지역종합연구소와 대한방직협회의 내부자료를 제공한 김양화 교수께 감사드린다.

\*\* 인제대학교 국제경상학부, e-mail: econseop@inje.ac.kr

## I.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한국과 대만정부의 경제운용에서의 동업자단체의 역할을 검토하는 것이며, 그 기간은 1950-80년이다. 이 글에서의 동업자단체는 동일업종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협력체를 가리키며, 한국에서는 공업협회 또는 협동조합으로, 대만에서는 同業公會로 불리는 단체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덧붙이면 중국에서는 行業協會, 일본에서는 업계단체 또는 협동조합으로 불린다. 이 글은 한국의 대한방직협회와 한국면제품수출조합, 대만의 紡織工業同業公會와 중화민국의 방직업수출개척회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는데, 그 이유는 1950-80년에 한국과 대만 모두에서 면방직업<sup>1)</sup>이 주요 산업이었기 때문이다(隅谷三喜男 1992: 107, 121).

논리적으로 살펴볼 때, 정부 경제운용에서의 동업자단체 역할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정부정책에 순응하여 정책을 집행할 수도 있고, 정부정책에 자기 업종의 이익을 가능한 한 크게 반영하려 행동할 수도 있고, 활발한 정보교환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어 정책 수립과 집행의 효과를 크게 할 수도 있다.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동업자단체의 행동이 위의 어느 하나에 귀착하지는 않는다. 동업자단체들이 정부와 정보를 주고 받고, 정부에 협력하지만, 또 한편에서 자기 업종의 이익을 크게 하려 노력하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자세히 검토하겠지만 필자는 1950-80년의 한국과 대만 동업자단체의 행위를 교섭을 동반한 협력이라고 판단한다. 한국과 대만의 동업자단체에는 차이도 있는데 그것은 본문에서 언급할 것이다.

이 글이 대상으로 하는 기간은 1950-80년이다. 이 기간으로 한정하는 하나의 이유는 1980년 이후에 정부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82년부터 시작한 한국의 제5차 경제개발계획과 대만의 제8차 경제건설계획은 두 가지 모두 물가안정, 공평한 소득분배, 국민복지의 향상을 경제성장만큼 중시했다. 그 이전에는 경제성장이 가장 중요했다(강광하 2000: 88; 정광원 1993: 27-28). 또 다른 이유는 두 나라 모두에서 1980년대부터 동업자단체의 이익단체적 성격이 강해지는 것이다(김의영 1998; Chu 1994).

1950-80년에 한국과 대만정부가 동업자단체를 중시했던 중요한 이유는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데에 동업자단체의 협력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

1) 이 글에서 방직은 면사생산을, 직포는 면포생산을, 방직은 방직과 직포의 양자를 가리킨다.

이다. 동업자단체는 자기 업종의 이익을 높이려 교섭했지만 가격안정, 증산, 수출 증대 등의 정책목표에 협력해야 했다.

동업자단체가 실제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했는가 아닌가는 본문에서 검토되지만 논리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한국과 대만의 고도성장을 낳은 하나의 요인으로 특정 계층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경제정책이 수립되었고, 그 경제정책이 명확한 지원 규칙과 심사 제도에 있어서 집행되었음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는 우수한 경제관료가 존재했다는 것과 경제관료가 민간부문으로부터 자율적이었던 것이 지적되었다(World Bank 1993: 156-170).

그렇지만 경제관료가 민간부문으로부터 자율적이었던 주장에 대해 자율적이기만 한 국가는 경제운용에 필요한 지식을 민간에게서 구하기 어렵고, 정책집행에서도 민간부문의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의 효과적인 운용에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있다. 아울러 정부가 민간부문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면 민간부문에 의해 포섭될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가 민간의 많은 부문과 균형 잡힌 관계를 동시에 가지면 그 위험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되었다(Evans 1995: 12).

위의 비판과 주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과 대만 정부의 많은 위원회와 위원회에서의 정부관료와 민간의 빈번한 접촉 및 한국과 대만에서의 여러 경로를 통한 정부와 민간의 접촉을 고려할 때, 한국과 대만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의 효과가 높았던 것은 정부가 독립적이지 아니였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민간과 빈번히 접촉하여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정책을 세우고, 정책과 관련되는 민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부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동업자단체가 응분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물론 필자는 정부가 시장신호를 무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을 정책적으로 우대했기 때문이다(김낙년 1999). 그렇지만 이 글의 초점은 이미 제목에서 드러나 있듯이, 非市場的 조직들의 활동에 두어진다.

1950-80년의 한국과 대만의 동업자단체에 대한 연구는 적다. Moskowitz (1984)는 1970년대의 한국 섬유산업연합회를 연구했는데 그 연합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정부와 섬유산업계의 의사소통임과 동시에 정부 경제정책에 섬유산업계가 순응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양화(2001)는 1950-60년대에 대한방직협회(이하

에서는 방협으로 줄임)가 수출증대와 물가안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검토했다. 김양화의 연구에 의하면 정부와 동업자단체의 관계는 지시와 순응의 관계만은 아니었다. 정부가 수출증대와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업자단체와 교섭해야 했는데 동업자단체는 회원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자기목표를 가지고 정부와 교섭했다. 대만의 동업자단체에 대한 본격적인 논문은 눈에 띄이지 않지만, Wade(1990)의 제8장과 제9장 및 Chu(1994)는 대만의 동업자단체가 대만정부에 의해 정치적으로 동원되었음을 강조한다. 한편 蕭正堂(1977)은 면제품<sup>2)</sup> 수출과 관련해서, 許惠姍(2003)과 李怡萱(2004)은 면제품을 자급하고 면제품 가격을 안정시키려 했던 대만정부의 활동과 관련해서 동업자단체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다. 이런 연구들이 증가하면 한국과 대만에서의 동업자단체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 글의 제2절은 한국, 대만, 일본, 중국에서의 20세기 전반의 동업자단체 활동을 검토한다. 이렇게하여 한국과 대만에서의 동업자단체 역할이 1945년 이후에 그 시기의 외국의 정책을 모방하며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자국의 역사적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서 동업자단체 활동이 한국과 대만경제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이 일본을 포함하는 것은 한국과 대만의 동업자단체 제도가 일본에서 도입되었기 때문이며, 중국을 포함하는 것은 대만 국민당이 중국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제3절은 한국과 대만의 동업자단체 역할을 검토한다. 한국에 대해서는 방협과 면제품수출조합을 소재로 증산, 가격안정, 수출증대, 수출쿼타 배정에서의 역할을, 대만에 대해서는 紡織工業同業公會와 방직업 수출개척회를 소재로 증산, 가격안정, 수출쿼타 배정에서의 역할을 검토한다. 제3절에서 紡織工業同業公會의 검토기간이 방협보다 짧은데 그것은 대만에서 면제품 공급부족이 한국보다 빨리 해소되었고, 대만에서는 수출증대에 동업자단체가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이 글에서 면제품은 면사와 면포를 가리킨다.

## II. 독립국가 수립 이전의 동업자단체 활동

메이지유신 이후에 일본에서 동업자단체의 설립을 둘러싸고 민간부문과 정부 사이에 논의가 있었고(박섭 2006), 그 논의를 거쳐 1884년에 일본정부가 「同業組合準則」을 시행했다. 1900년에 「重要物産同業組合法」으로 개정되었고, 동업조합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게 되었다(竹內庵 1987: 340). 일본의 「동업조합준칙」은 제품개량을 목적으로 했고, 「중요물산 동업조합법」도 마찬가지였다. 제품개량의 방법은 동업조합에 제품검사 기관과 검사원을 두며 제품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었다(清川雪彦 1984: 161-162). 아울러 같은 시기의 農商務省의 지시들은 동업조합이 제품가격, 수수료, 임금, 종업원의 직장이동을 규제하는 규칙을 두지 못하게 했다(竹內庵 1987: 344-345). 일본정부는 동업조합이 그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교섭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업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대만의 동업자단체는 일본의 영향을 받으면서 출발했다. 일본의 지배를 받기 이전에는 동업자단체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19세기까지 한국에는 동업자단체가 미약했으며 대만에서는 동업자단체보다는 同鄉團體가 많았다. 대만에서는 1898년부터 지방장관의 허가 아래 동업조합이 설립되었고(臺灣總督府殖産局 문서 1898년 2월 9일), 1914년에 「중요물산 동업조합령」이 시행되었다(臺灣日日新報社 1999: 32). 조선총독부는 1915년에 같은 법령을 시행했다. 두 동업조합령의 주된 목적은 품질개량, 불량품 단속, 생산량 증가였다(小早川九郎 1944: 176). 대만총독부 공문서와 당시의 신문기사에 의하면 미곡의 생산과 판매, 석탄생산, 운송, 모자와 모자원료 제조, 차 매매, 도정, 제빙, 청과물 매매, 파인애플 생산, 화훼 등에서 동업조합이 조직되었다. 조선에는 1933년 초에 239개의 동업조합이 있었다(朝鮮總督府殖産局 1935: 14, 부표 8). 신문 기사를 검토하면 조선과 대만의 동업조합 사례를 알아 낼 수 있다. 제품검사, 품질개량, 판로확장, 거래조건 교섭, 총독부에 대한 로비, 저리자금의 제공, 생산량과 가격의 협정 등을 행했다. 법령의 목적이나 실제의 활동에서 일본과 유사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제1차 대전이 끝난 뒤부터 공업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중소기업 투자자금이 불충분하고, 생산기술이 낮은 문제점이 빈번히 지적되었다. 그리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또 그들의

과당경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업조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출되었다(『京城日報』 1933년 11월 7-8일). 조선총독부도 그렇게 할 필요성을 느꼈지만, 중소기업간에 규모와 기술의 격차가 컸기 때문에 지지부진했다(『釜山日報』 1938년 10월 22일).

1937년 겨울에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군수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업 생산자를 조직하고, 그 단체들을 정부정책에 순응시킬 필요가 생겼다. 조선총독부가 1938년 8월에 「朝鮮工業組合令」을 공포했다(朝鮮總督府殖産局商工科 1939: 18). 공업조합의 목적은 생산물 검사, 조합원 사업규모의 통제, 공동가공, 공동구매, 제품의 질과 가격의 규제 등이었다. 조선방직공업조합을 살펴보면, 수출용의 면직물을 검사했고, 총독부가 배급한 원재료를 조합원에게 배정했고, 생산책임량을 조합원에게 배정했고, 조합원의 과잉생산량을 구매하고 총독부의 허가를 얻어 그것을 판매했다(『朝鮮工業組合』 3권 3호: 15-16). 총독부는 상공업자가 그들의 단체를 운용하는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원가계산, 조합 부기, 조합 감사, 조합 경영에 관한 강의를 개최했다(『朝鮮工業組合』 1호 1942: 59; 『朝鮮工業組合』 2-1호 1943: 44). 1944년의 조사에 의하면, 공업조합이 169개 있었고(『朝鮮工業組合』 3-3호 1944: 4), 28개의 방직업 관련 조합 가운데 평양메리야스공업조합, 전라남도메리야스공업조합, 조선메리야스공업조합연합회, 조선방직공업조합의 이사장은 한국인이었다(『朝鮮工業組合』 3-3호 1944: 5-6). 대만에서는 1944년까지 공업조합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 동업조합을 증설하고 조직을 개선하여 증산, 시가조절, 판매 통제 등을 행했다(『臺灣日日新報』 1939. 2. 12).

1941년에 일본에서 「중요산업단체령」이 시행되었고 일본정부는 대기업을 많은 산업에도 동업자단체를 설립하도록 유도했다(米澤誠一郎 1993: 192). 1944년에는 「朝鮮工業統制令」이 시행되었고(김인호 1998: 185), 같은 시기에 대만총독부도 통제회를 설립하는 정책을 폈다(張宗漢 2001: 117). 공업조합은 통제회와 비교하면, 중소기업이 많은 산업에서 만들어졌다.

중국에서는 1930년에 「工商同業公會法」이 시행되었다. 그 법에 따르면 업종별로 단 하나의 동업자단체만이 결성될 수 있었다(이병인 2006: 284-287). 『상해시연감』 1935년판에 의하면 217개의 동업자단체가 있었다(이병인 2006: 311-319). 여러 연구에 의하면 중국정부는 동업자단체는 증산, 수출증대, 품질개선에 활용했다<sup>3)</sup>

3) [http://www.cnfi.org.tw/kmportal/front/bin/ptlist\\_phtml?Category=100002](http://www.cnfi.org.tw/kmportal/front/bin/ptlist_phtml?Category=100002)

(久保亨 1981: 97-101; 奥村哲 1978: 260).

이상의 검토에 의하면 20세기 전반에 한국, 대만, 중국, 일본에 많은 동업자단체가 설립되었고, 동업자단체를 운영하는 역량이 만들어졌으며, 동업자단체가 정부 정책에 협력하여 증산, 수출증대, 품질개선에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필자의 다른 연구에 의하면 미국이나 서유럽의 동업자단체는 품질개선보다 가격과 생산량의 협정에 노력하는 일이 많았다(Park 2007). 그러므로 1950년대 이후의 한국과 대만 동업자단체의 경제적 역할은 구미의 경험을 도입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역사적 경험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 Ⅲ. 동업자단체의 경제적 역할

#### 1. 대한방직협회

1940년 11월에 한국의 남부에 195개의 섬유관계 동업자단체가 존재했다. 이 글의 소재와 관련하면 조선방직공업조합<sup>4)</sup>이 그 가운데 하나였다(朝鮮織物協會 1940). 해방 직후에는, 그 동업자단체들이 법적으로 청산된 것은 아니었지만, 해산된 것과 마찬가지로 상태였다. 미군정의 방직공장 운영위원회가 그 위원회에 소속된 면방직 기업에게만 미국에서 원조된 면화를 공급하려했던 것이 방직업의 동업자단체가 재결성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었다. 면화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면방직 기업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야 했지만 그 위원회가 자신들의 기업 경영을 간섭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경성방직과 위의 기업들은 협회를 만든 다음에 그 위원회에 들어가면 교섭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1947년에 조선방직협회가 결성되었고 경성방직 사장이었던 김용완이 이사장에 취임했다(한국 섬유산업단체 연합회 1971: 761). 설립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조선 방직협회가 식민지기의 조선방직공업조합의 물적 재산을 인수하지는 않았다(대한방직협회 1957: 12), 그렇지만 1940년에 조선방직공업조합의 이사장이 김연수였고, 김연수가 경성방직의 사장이었으며(朝鮮織物協會 1940: 1), 김용완이 상무였던 것을 고려하면, 조선방직공업조합의 경험이 조선방직협회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을

4) 일본어에서는 방직과 방직을 합해서 방직이라고 부르고, 한국어와 중국어에서는 양자를 합해서 방직이라고 부른다.

것이다.

조선방직협회가 설립되는 경과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의 면방직 기업에게는 충분한 원면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 방협은 방협이 원면의 독점 구매자로 지정되고 싶어했고 1954년에 그렇게 되었다(『사업보고서』 1967: 466). 같은 해에 방협이 「FOA 실수요자 구매원면 관리요령」을 제정했는데<sup>5)</sup>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방협월보』 1954년 10월: 13-19). 방협에 「원면관리 특별위원회」를 둔다. 각공장의 원료 수요량의 비율에 따라 원면을 구매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달러<sup>6)</sup>를 배정한다. 회원기업의 원면 구매량과 원면의 실제 소비량이 일치하지 않으면 원면을 회원 기업 사이에서 다시 배정한다. 각 공장은 원면관리 특별위원회의 지시를 이행해야 한다. 위의 관리요령은 원조면화만이 아니라 국산면화의 배정에도 적용되었다. 1955년에는 규정이 더 정비되어 40%는 면사 생산계획에 따라 60%는 원면 소비실적에 따라 배정되었다(김양화 1990: 28). 과거와 미래의 생산능력을 적절히 조화하여 가능한 한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였다.

〈그림 1〉에 의하면 1967년에는 1951년의 14배가 생산되었다. 1968년에는 생산이 감소했는데 그것은 1968년의 가격하락에 기인했을 것이다(〈그림 2〉). 1968년 이후에는 다시 증가했다.

박정희 정부에 들어와 원조면화 배분 방침에 변화가 생겼다. 1965년에 미국면화 구매용 달러를 60%는 생산시설에 비례하여 배정하고, 40%는 수출실적에 비례하여 배정하도록 방협에 요청했다(『사업보고서』 1965: 49). 방협은 정부의 요청을 반영하여 그 때까지의 배정방법을 수정했다. 그리하여 1967년에는 70%가 시설에 비례하여 지급되었고 30%는 수출실적과 수출계획에 따라 배정되었다(『사업보고서』 1967: 131-132). 이 방법이 1968년과 1969년에도 지속되었다(『사업보고서』 1969: 216).

이 사실은 박정희 정부에 이르러 면제품 수출이 방협의 과제로 되었음을 나타낸다. 이하에서는 수출증대를 둘러싼 정부와 방협의 교섭을 살펴보자. 〈표 1〉에 의하면 박정희 정부는 1965년에 면제품의 수출목표로서 1,520만 달러를 제시했으며, 방협에게 위의 수출목표를 회원기업에 배정하여 그것을 달성할 것을 요청했다(『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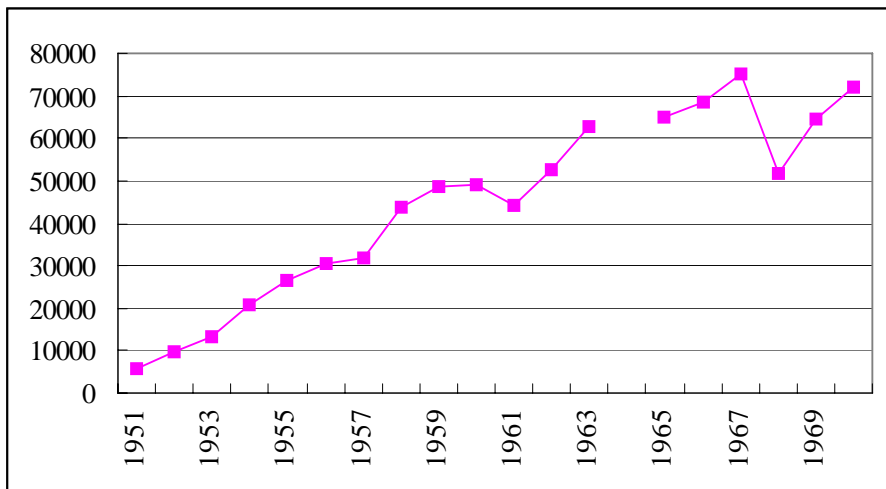
5) FOA는 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대외활동본부)의 줄임말임. 미국 정부기관의 하나였음.

6) 이 글의 달러는 모두 US달러임. NT달러는 元으로 표기함.



업보고서』 1965: 75).

〈그림 1〉 면사 생산량 (단위: 톤)



자료: 『한국통계연감』 1960, 1964, 1970, 1971.

〈표 1〉 면제품 수출목표액과 실적액 (단위: 천달러)

	1965	1966	1967	1968	1969
목표액	15,200	17,350	18,500	24,600	28,700
실적액	13,009	15,430	19,266	21,000	33,382

1965년에 방협이 면사의 수출 책임액을 달성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구체적인 시책을 내었다. 하나는 수출책임제였고 다른 하나는 수출손실 自家報償制였는데 방협은 두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출책임제 및 운영 소위원회」를 두었다. 소위원회는 수출실적을 확인했고 수출 보상기금을 적립했고 수출품에 사용되는 원자재의 가격을 결정했다(『사업보고서』 1966: 100).

먼저 수출책임제에 대해 살펴보자. 당시에 면방직 기업의 방추는 수출용과 내수용으로 나뉘어 등록되어 있었다. 원칙적으로 새 방추가 수출용 면제품으로 등록되었고 낡은 방추가 내수용으로 등록되었는데, 1966년에 수출용으로 119,948추, 내수용으로 556,680추가 있었다(『사업보고서』 1966: 105).

그런데 위의 규정에 따라 수출목표액을 배정하면 새 방추를 많이 가진 기업일수

록 수출량이 많아지고 그 결과로 이윤이 적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국내시장보다 국제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하여 국제시장에서는 국내시장보다 낮은 값에 팔아야 했기 때문이다. 1962년의 계산에 의하면 20수 면사, 30수 면사, 면포를 각 1달러씩 수출하면 수출에 따른 손실액이 각각 31원, 28원, 51원이었다(『이사회 회의록』 1962년 3월 19일). 박정희 정부가 1961-65년에 면포 수출 1달러에 대해 15-25원을 보조했지만(김양화 2001: 3), 그것으로서는 40%를 충당할 수 있을 뿐이었다. 1966년에 京城紡織, 東一紡績, 全南紡績, 大田紡績, 阪本紡績, 日新紡績이 수출용으로 등록된 방추를 가지고 있었는데 위의 규정에서는 위의 방적기업만이 불이익을 겪어야 했다(『사업보고서』 1966: 105).

그리하여 방협은 수출용으로 등록된 방추의 70%와 내수용으로 등록된 방추의 30%를 수출용 시설로 간주하여 수출책임액을 분담하는 것으로 수정했다(『사업보고서』 1966: 95). 그러자 豊韓紡績, 興韓紡績 國安紡績, 韓永紡績은 내수용 시설의 30%를 수출에 사용해서는 이윤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고, 그 결과로 豊韓紡績은 내수용 방추의 20%, 興韓紡績과 國安紡績은 내수용 방추의 7.5%만을 수출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했다. 韓永紡績은 수출하지 않아도 되었다(『사업보고서』 1966: 105).

1967-70년에는 위의 비율에 변함이 없었고, 1971년에는 그 비율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465,384추가 내수용 시설로, 496,496추가 수출용으로 등록되어 있었는데(『사업보고서』 1971: 185), 수출용 방추의 60%와 내수용 방추의 40%를 수출용 시설로 간주하여 수출 책임액을 분담했다. 1966년과 비교하면 수출용의 새 방추를 많이 가진 기업이 덜 불리하게 되었지만 원칙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수출용으로 등록된지 5년이 지난 시설은 내수용으로 돌릴 수 있었다(『이사회 회의록』 1971년 제3회).

이어서 수출손실 자가보상제를 살펴보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제시장에서는 한국산 면제품의 단가가 원가이하였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손실이 커졌다. 그 때문에 방협은 회원기업이 내수용 수입면화 구매자금을 배정받을 때 그 수입면화 1달러당 일정액의 부과금을 징수하여 손실보상에 사용될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을 수출실적에 따라 분배하기로 했다. 1966년에 방협은 내수용 수입면화 1달러당 15원을 징수했고(『방협월보』 1966년 11월: 103) 방협은 그렇게 해서 만든 기금에서 회원기업의 순면제품 수출액 1달러에 대해 25원씩 보상했다<sup>7)</sup> (『사업보고서』

1966: 95). 어떤 회원기업이 수출 배정액 이상으로 수출하면, 초과 수출액에 대해서는 1달러당 30원을 보상했다(『사업보고서』 1966: 95).

1967년에는 방협이 내수용 원면 자금을 배정받을 때 1달러당 15원씩 적립하며, 순면제품 수출책임액 50%까지는 수출액 1달러당 22원을 지급하고 그 이상은 25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대한방직협회 1977: 136). 1968년에는 내수용 원면 자금 1달러당 20원을 적립하고 1달러당 40원을 보상하기로 했고, 1969년에는 30원을 적립하고 50원을 보상하기로 했다(대한방직협회 1977: 136).

1970년에는 방협이 보상금을 크게 떨어뜨렸다. 그것은 1969년에 적립금이 크게 부족했기 때문이다. 수출 자가보상액 기금이 1966년에 6,163만원의 적자, 1967년에 9,882만원의 흑자, 1968년에 4,611만원의 흑자였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 연도가 있으면서도 기금의 운용이 순조로 왔지만 1969년에는 5억 7,062만원의 적자가 났다(김양화 2001: 9). 그리하여 1970년에는 1달러당 30원을 적립하고 1달러당 20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했다(대한방직협회 1977: 137).

방협은 1971년에는 현금 자가보상 제도를 폐지하고 수출실적에 따라 내수용 원면을 배정할 계획을 세웠다(『이사회 회의록』 1971년 제1회). 위의 방침에 대해 興韓紡績과 忠南紡績이 소규모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반발했고 京城紡織과 大韓紡績 등의 대기업이 그 주장에 동조하여 자가보상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 그리하여 수입원면에 대한 세금감면액 1달러당 16원을 적립하고 내수용 원면 자금에 대해 1달러당 30원을 적립하여 기금을 마련하며 수출업체에 1달러당 25원을 지급하기로 했다(『이사회 회의록』 1971년 제3회).

앞에서 보았듯이 수출액을 분담할 때 새 방추를 가지고 있는 기업과 낡은 방추를 가지고 있는 기업 사이에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 일이 있었는데 수출손실 자가보상 제도의 시행에서는 기업의 규모와 경영능력의 차이가 갈등을 일으켰다. 일부의 기업이 정해진 1달러당 적립금과 보상금으로는 이익을 낼 수 없었던 것이다. 방협은 그 문제를 회원기업들의 적립금과 보상금의 크기를 조절하여 해결했다. 1970년의 최초의 안은 1달러당 적립금이 30원이었고 보상금이 20원이었다. 보상금이 적립금의 67%를 차지했다. 그런데 興韓紡織, 忠南紡織, 大成紡織 등 경쟁력이 낮은 기업들이 그 보상금과 적립금에서는 이윤을 낼 수 없다고 항의했고 논의 끝에 그 기업

7) 이하에서 보상금은 모두 순면제품 1달러에 대한 보상금임. 면혼방, 화섬혼방, 순화섬에도 보상금이 주어졌는데 순면제품보다 적었다.

들의 적립금은 1달러당 20원으로 보상금은 16원으로 조정했다. 보상금이 적립금의 80%를 차지했다(대한방직협회 1977: 137).

1971년에 1달러당 적립금은 46원이었고 보상액은 25원이어서 보상금이 적립금의 54%였지만 흥한방직과 충남방직의 적립금은 30원이었고 보상금은 20원이어서 보상금이 적립금의 67%를 차지했다(『이사회 회의록』 1971년 제4, 6, 16, 18회).

방협이 개발한 위의 두 제도는 성과를 발휘하여,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방협은 1965-69년에 정부가 제시한 수출목표의 85-116%를 달성했다(『사업보고서』 196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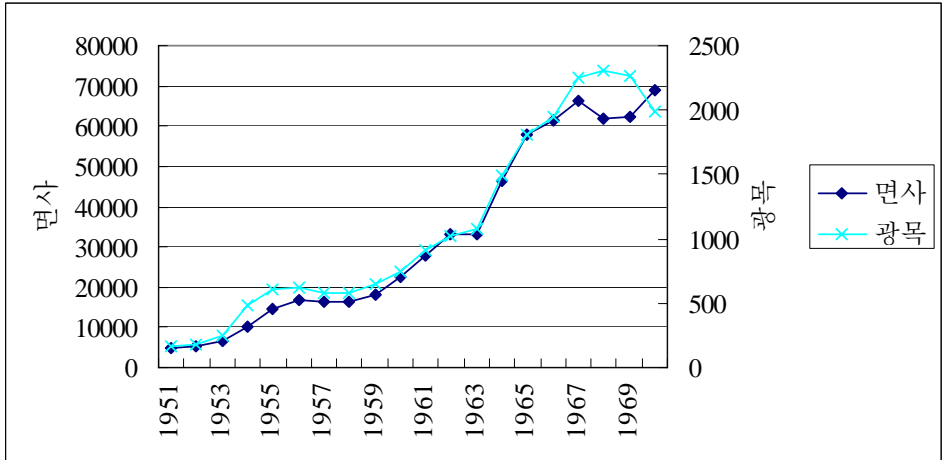
이번에는 가격안정을 둘러싼 정부와 방협의 교섭을 살펴보자. 방협이 1954년 4월에 『면제품 수입방지 및 기계설비도입에 관한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방협월보』 1955년 1월: 195). 면제품 수입대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안이었다. 그 해 8월에는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상공부와 방협이 좌담회를 열었다(『방협월보』 1955년 1월: 203). 이 좌담회 이후 외국 면제품의 수입금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1954년 12월부터 40수 이상의 외국산 면사가 수입금지되었다.<sup>8)</sup> 그러자 면제품 소비기업들이 면제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음을 이유로 그 결정에 반대했다(김양화 2001: 28). <그림 2>에 의하면 1954년까지 면사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틀림없이 있었다. 그리하여 방협은 면제품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면 상인을 매개하지 않고 적당한 가격으로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것을 약속했다.

그 이후 방협과 메리야스 공업협회 연합회, 방협과 대한직물조합연합회 사이에서 직거래가 단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두 단체 사이에 협정이 처음 맺어진 것은 1954년 12월이었으며, 1955년 1월에 1천곤(捆)<sup>9)</sup>이 거래되었다(『방협월보』 1955년 1월: 211). 겨울이 지나가면서 메리야스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1955년 4월에는 중지되었으나(『방협월보』 1956년 1월: 162), 같은 해 12월에는 다시 직거래되었다(김양화 2001: 28). <그림 2>에 의하면 1956-58년에는 가격이 안정되어 직거래가 행해지지 않았다. 1959년 8월에 19,000원을 넘으면서 직거래가 다시 제기되었

8) 1956년 6월에는 40수 이하의 외국산 면사의 수입도 금지되었으며 모든 외국산 면직물도 수입 금지 되었다.

9) 1곤은 181킬로그램(400파운드) 임.

〈그림 2〉 면사와 광목 가격 (단위: 원)



주 : 면사는 20수 2등급 1곤의 가격이며, 광목은 40야드의 가격임.

자료: 『경제연감』 1957, 『한국통계연감』 1962, 1972.

고,<sup>10)</sup>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상공부, 부흥부, 방협이 연석회의했다. 상공부가 20수 면사의 1곤당 가격을 18,000원 이내로 억제할 것을 지시하자 방협은 그것에 협력하는 대신에 원조면화 구매자금을 계속해서 방협에게만 배정하도록 요청했으며 부흥부가 그것에 동의했다. 아울러 면사를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실수요자에게 직접 배분하기로 결정했다(『조선일보』 1959년 8월 12일). 그리하여 방협이 8월에 메리야스 공업협회 연합회, 직물조합 연합회, 厚織 공업조합에게 1천곤을 1곤당 19,000원에 직매했다. 9월에도 1천곤을 직매했다(『조선일보』 1959년 9월 4일). 11월에는 이후로 한 달에 3천곤을 직매하기로 합의했다. 가격은 20수가 19,000원, 23수가 21,000원이었다. 시장에는 한 달에 1,500곤만을 출하하기로 했다(『조선일보』 1959년 11월 20일). 이 제도하에서 동업자단체들이 정부의 중개하에 직거래하여 가격상승을 억제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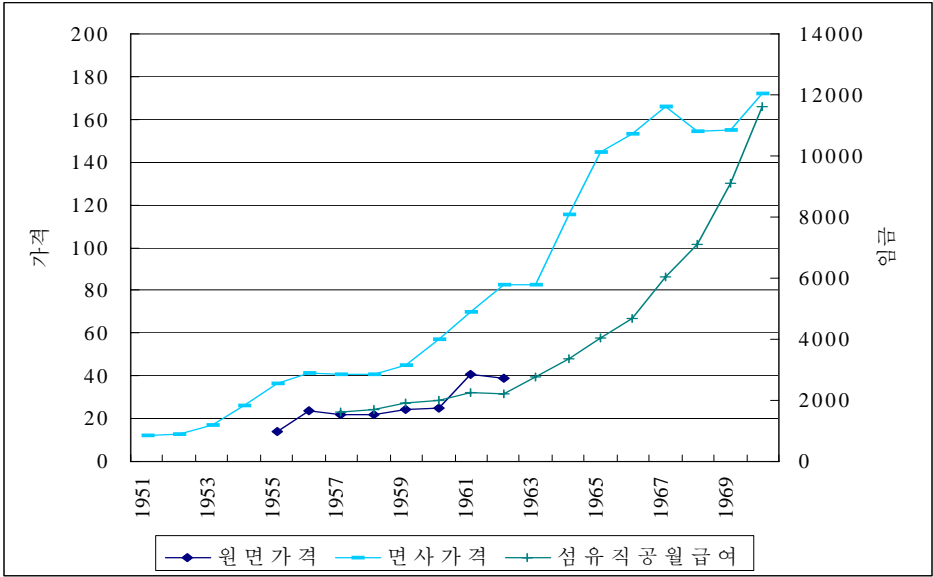
다른 방법으로는 방협이 1960년 3월 동대문시장에 공동판매장을 설치했고, 한 달에 20수 면사 1천곤을 1곤당 19,0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했다(『조선일보』 1960년 3월 15일). 1960년의 판매량은 알 수 없으나 1962년은 면사 4,496곤, 1963년은

10) 〈그림 2〉에 의하면 1959년 평균 가격이 17,912원임. 본문의 가격이 그림의 가격보다 높은 것은 본문의 면사는 1등급이기 때문임.

면사 1,500곤, 1965년은 9,150곤(『사업보고서』 1965: 47), 1966년에는 20,915곤(『사업보고서』 1966: 81), 1967년에 69,216곤, 1968년에 21,667곤이었다. 공동판매는 1971년까지 계속되었다(『방협월보』 1971년 9월: 76).

또 하나의 방법은 면제품 책임생산제를 시행하여 국내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었다(『사업보고서』 1965: 109). 한국전쟁 중에 이 정책이 채택된 적이 있었지만(『조선일보』 1952년 4월 27일) 전쟁이 끝난 후에 폐기되었는데 1967년에 재개되었다. 정부는 23수 면사를 1967년에 26,939톤, 1968년에 33,300톤, 1969년에 56,296톤, 1970년에 60,493톤, 1971년에 60,700톤 생산할 것을 요청했다<sup>11)</sup>(『사업보고서』 1967: 92; 『사업보고서』 1969: 104; 『이사회 회의록』 1971: 147; 김양화 2001: 36). 생산실적이 미달하면 관세를 감면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방협 사무국은 매월 회원기업의 생산실적을 조사했고,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회사가 있으면 기획분과위원회를 소집하여 해결책을 찾았다.

〈그림 3〉 원면가격, 면사가격, 섬유직공 월급여



주 : 원면과 면사가격의 단위는 파운드당 원임. 월급의 단위는 원임.

자료: 『경제연감』 1957. 『경제통계연보』 1962-71.

11) 1969년부터는 내수용 賣絲의 생산책임량임.

〈그림 3〉은 원면가격, 섬유직공월급, 면사가격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다. 1963년 이후의 원면가격은 입수할 수 없어 나타나지 못했다. 〈그림 3〉에 의하면 원면가격과 면사가격의 움직임은 유사하며, 섬유직공월급과 면사가격의 움직임은 기간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섬유직공월급이 면사가격보다 더 빨리 증가했다. 한국정부와 동업자단체의 협력으로서 당시의 가격, 생산, 수출의 변화를 100%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가격안정, 증산, 수출증대에서 한국정부와 방협 및 다른 동업자단체가 협력했고, 그것의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紡織工業同業公會

1945-49년의 중국 내전에서 국민당이 공산당에게 패배했고 대만으로 후퇴했는데 그때 공업 부문 동업자단체의 연합회인 全國工業總會<sup>12)</sup>도 국민당과 함께 대만으로 철수했다. 또한 전국공업총회에 소속한 동업자단체 가운데 31개의 단체가 국민당과 함께 대만으로 철수했다. 제2절에서 설명했듯이 1945년 이전에 대만에는 많은 동업자단체가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1949년 이후의 대만 동업자단체는 대륙과 대만에서의 경험이 상호작용하여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만정부는 대만으로 후퇴한 1949년부터 생활필수품 증산과 가격안정에 동업자단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工商協進會는 대기업 단체였는데 그것의 명예이사장이었던 東雲章은 「공상협진회의 창립경과」라는 수필에서 ‘대만정부는 민간에 건전한 조직이 있어야만 정부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1951년에 공상협진회를 설립했다’고 증언했다(東雲章 1971: 40).

지금부터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면방직업의 동업자단체에 대해 살펴보자. 한국은 식민지기에 방직공업이 발달했지만, 대만은 미약했다. 1942년에 대만의 공업 총생산액을 살펴보면 식료품 공업의 비중이 가장 높아서 전체의 54.6%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화학공업이 12.1%를 차지했으며, 방직공업의 비중은 1.6%에 지나지 않았다(張宗漢 2001: 144). 그 때문에 1945년 이전에 대만은 면제품을 일본에서 수입했다. 1941년에 대만에서의 면포 총 공급량이 3,760만 평방야드였는데 그 가운데 89.4%가 일본에서 수입되었다(『中國經濟月刊』 1951년 6월: 51). 1945년

12) 전국공업총회는 1942년에 설립된 중화 공업총연합회의 후신이다. 1947년에 국민당 정부가 대륙에서 「工業會法」을 제정했는데 그에 따라 1948년에 전국공업총회가 설립되었다.

에 해방된 이후에는 일본과의 무역이 중지되었고 일본 대신에 중국대륙에서 면제품이 수입되었다. 당시에 중국대륙의 면방직업은 꽤 발달해 있었다. 20수 정도의 거친 면제품에서는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 수출도 되고 있었다.

1949년에 중국대륙을 공산당이 장악하자 중국과의 무역이 급감했다. 국민당이 중국대륙에서 대만으로 후퇴할 때 大秦, 擁興, 申一, 華南, 中紡, 台元, 彰化, 遠東이라는 여덟 개의 방직공장이 함께 이동했지만(李怡萱 2004: 34) 그것으로는 대만의 면제품 수요를 충족할 수 없었다. 1950년 초에 대만의 연간 면사 수요가 2,400만 파운드였고 그것을 위해서는 11만 4천개의 방추가 필요했지만 가동중인 방추는 41,876개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면제품 가격은 언제라도 등귀할 수 있었다.

1947년 3월에 중국 국민당 정부와 일본의 미군정 사이에 무역협정이 맺어졌고, 일본이 대만의 원당을 1년에 25,000톤씩 구매하고 있었다. 국민당이 대만으로 후퇴한 이후 대만정부는 이 협정에 입각해서 면화와 면제품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면화는 무세, 면사 관세율은 5%, 면포 관세율은 20%로 책정되었다. 이후로 일본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면제품이 많이 수입되었다. 元이 약 26% 과대평가되어 있었던 것도 많은 수입의 이유였다(李怡萱 2004: 56). 그 덕택에 면사가격은 크게 안정되었다. <그림 4>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국민당이 대만으로 후퇴한 1949년 10월부터 1950년 6월까지 10.5% 상승했을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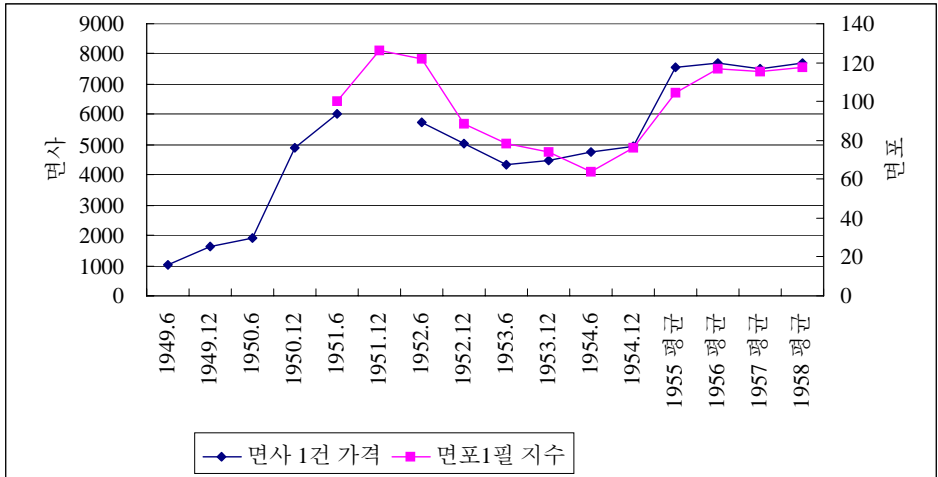
1947년에 국민당 정부가 대륙에서 『工業會法』을 제정했는데, 대만정부는 그 법률에 입각해서 1949년에 紡織工業同業公會(이하에서는 면방직협회로 줄임<sup>13)</sup>)를 설립했다. 그런데 1950년 4월에 방직공업 동업공회가 생산사업 관리위원회(이하에서는 생관회로 약칭)에 일본 면제품 때문에 면제품의 시가가 하락했고, 그 때문에 대만의 다수 면방직기업이 원가 이하로 판매하거나 면방직기업들에 재고가 쌓이고 있으며, 그로 인해 감산 및 휴업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서 면제품을 수입금지할 것, 면제품 재고를 수매할 것, 면방직 기업에게 저리의 차관을 제공할 것 등을 정

13) 1949년에 설립된 紡織工業同業公會는 그 이후에 機器棉紡織工業同業公會로 개칭되었다. 이하에서 면방직협회는 방직공업 동업공회와 기기면방직공업 동업공회 모두를 가리킨다. 면방직협회에는 방직과 직포만 아니라 염색업 기업도 참가했다. <http://www.prt dyeing.org.tw/company/company-c.htm>



부에 요청했다(李怡萱 2004: 59). 1949년 10월부터 1950년 4월까지 근소하게 상승했지만 면방직협회가 가격이 하락했다고 표현한 것은 물가상승률을 하회했기 때문 일 것이다.

〈그림 4〉 20수 면사가격 및 면포 가격지수 (단위: 元)



주 : 면포 가격지수는 1951년 6월을 100으로 함. 면사는 1견=181kg당 가격. 면포는 1필에 12파운드 짜리임. 회사별로 가격이 달라서 절대값을 제시하지 않음.

자료: 『中國經濟月刊』 1950년 11월: 62; 許惠姍 2003: 61, 120; 李怡萱 2004: 131 『臺灣銀行季刊』 1953년 5월: 41; 1954년 7월: 31 『財政經濟月刊』 1954년 4월: 18; 1955년 2월: 19; 1956년 1월: 26;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1967: 114.

이 요청을 받은 생관회는 대만의 면방직 공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만 면방직 공업의 성장 문제를 다룰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1950년 5월에 면방직협회 이사장 李占春에게 그것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청했다(李怡萱 2004: 60). 그 결과로 같은 달에 생관회 산하에 방직소조가 설립되었는데 11명의 위원 가운데 방직업 관련 동업자단체 대표가 4명, 면방직 기업가가 5명, 다른 공업 부문의 대표가 3명, 수출입상인 및 면포상인 대표가 1명, 공업회 대표가 1명이었다(許惠姍 2003: 36).

1950년 6월의 회의에서 생관회 방직소조가 다음을 결의했다. 일본으로부터의 면제품 수입세율을 국정세율 수준으로 인상할 것(李怡萱 2004: 61), 정부가 대만에서 생산된 면제품을 전부 수매할 것, 정부가 그만큼 수매할 수 없다면 정부가 면제품

수입을 잠정 정지할 것, 정부는 공급량이 수요보다 부족할 때만 수입을 다시 허락할 것, 정부가 면제품 수요량을 본 방직소조에 알려주면 본 방직소조는 각 공장에 생산량을 배정하여 공급이 부족하지 않게 할 것임 등이었다(李怡萱 2004: 61). 국정세율에 의하면 면사가 50%, 면포가 65%였다(李怡萱 2004: 119). 그런데 같은 달에 한국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논의할 필요는 없어졌다. 대만으로의 면제품 공급이 감소했고, 〈그림 4〉에 따르면 1950년 6월부터 20수 면사가격이 급등했다.

이상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일본으로부터의 면제품 수입이 증가하여 면방직업계가 타격을 입었을 때에 면방직협회가 정부에 그 대책을 요청했고 정부는 면방직협회의 협력을 얻으면서 그 대책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미국 원조물자의 사용방법을 검토해보자. 미국은 1950년부터 대만에 면화, 면사, 면포를 원조했다. 이것은 대만의 면제품 부족을 완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1950년 통계에 의하면 그 한 해 동안 면화가 201만 달러, 면사와 면포가 각각 16만 달러 원조되었다(『中國經濟月刊』 1951년 1월: 13-14). 대만정부와 미국 정부는 원조된 면화와 면사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가능한 한 많은 면제품을 생산해야 했다. 그것을 위해서 美國援助委員會(이하에서는 미원회로 줄임) 紡織小組를 설립했다. 위원은 미원회, 美經濟合作總署 중국분서, 대만정부 경제부, 면방직협회, 면방직 기업 등에 소속된 인물이었다(許惠姍 2003: 40).

원조면화는 미원회 방직소조가 방직기업에 직접 대부했다. 대부 면화 650파운드당 400파운드의 면사를 정부가 징수하는 것이 대부조건이었다. 방직기업이 400파운드의 면사를 생산하는 데에 470파운드의 면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180파운드의 면화가 기업에 남았는데 그것으로 제조한 면제품은 시판할 수 있었고, 그 수입으로 공장을 경영할 수 있었다. 이것이 代紡이라고 하는 제도였는데 면화를 얻는 대신에 반드시 일정량의 면사를 납부해야 했기 때문에 대만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제도였다(李怡萱 2004: 66). 정부에 의해 징수된 면사의 일부는 중앙신탁국이 방직기업에 생산을 위탁했고 나머지는 면방직협회, 針織工業同業公會(메리야스공업협회), 대만성 공업회가 방직기업에게 배정했다(『臺灣銀行季刊』 4-3: 180; 『臺灣銀行季刊』 5-2: 7).

원조면사의 약간은 중앙신탁국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정부기관에 배급했고 나머지인 대부분은 면방직협회의 회원기업에게 판매하거나 대부했다. 대부 받은 기업은

1개월 뒤에 그 가격을 지불해야 했다. 원조면포는 미원회 방직소조가 시장에 직접 유통시켰다(李怡萱 2004: 64; 『臺灣銀行季刊』 4-1: 251; 『臺灣銀行季刊』 4-3: 181).

그런데 위의 代紡제도에서 두 가지의 문제가 일어났다. 하나는 다수의 방직기업이 저급 면사는 중앙신탁국에 납부하고 고급 면사는 시장에 팔았던 것이며, 다른 하나는 면방직협회에서 면사를 배정받은 방직기업이 그 면사를 배정 받지 못한 소규모 방직기업들에게 재판매했던 것이다(『臺灣銀行季刊』 5-2: 7). 면방직협회가 배정할 때 적용되는 가격보다 시가가 크게 높았기 때문에 배정 받은 방직기업은 배정 받지 못한 방직기업에 판매하여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951년 6월에 면사 1건의 시장가격은 6천元 이었지만 공정가격은 4,200元이었다(許惠嫻 2003: 61).

정부는 1951년 6월에 『原綿管制分配辦法』을 제정했고 代紡제도를 개정했다. 바뀐 법률하에서 정부는 방직기업이 면사를 직접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방직기업이 제조한 면사 전량을 花紗布小組<sup>14)</sup>가 가공비와 합리적인 수준의 이윤만 지불하고 수매했다. 가공비와 합리적인 수준의 이윤은 면사 1건당 1,600元에 결정되었다(『財政經濟月刊』 2-9: 32).

면방직협회는 이 제도하에서는 방직기업의 이윤이 너무 적어서 방직공업이 발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代紡 수수료를 선급할 것, 면화의 품질이 나쁘면 더 많은 면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방하는 기업이 면화를 살펴보고 그 사용량을 판별하도록 해 줄 것 등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李怡萱 2004: 86-87).

1951년 8월에 『台灣省紗布管理暫行實施辦法』이 시행되었다. 이 법률하에서는 花紗布小組가 면사의 배정방법을 결정하고 중앙신탁국이 그 결정을 집행하게 되었는데 면사와 면포의 배정방법이 이전보다 정교하게 되었다(『臺灣銀行季刊』 5-2: 20). 그 자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로 면사의 일부를 군대, 어민, 농민 등에게 판매한다. 둘째로 중앙신탁국이 각 기관의 주문량과 방직기업의 생산계획에 근거하여 방직기업과 代織 계약을 맺는다. 셋째로 대직의 내용은 1건의 면사로 1필당 12파운드짜리 면포<sup>15)</sup> 33疋을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하고, 한 필당 37元을 가공임

14) 1951년 5월에 생관회와 미원회의 방직소조가 통합되었고 『花紗布小組』(Textile Subcommittee, CUSA-MSA Joint Committee, Taiwan)가 설치되었다. 화사포소조는 1951년 12월에 미원연합위원회 방직소조로 개칭되었다(李怡萱 2004: 77).

으로 지급하는 대신 면포 전량을 수매하는 것이다(『財政經濟月刊』 2-9: 32). 넷째로 방직기업이 시장 판매용으로 생산할 면포에 필요한 면사는 면방직협회, 메리야스공업협회, 毛巾工業同業公會(타올공업협회), 대만성공업회가 총괄하여 공평 분배한다. 방직기업은 건설청에 의해 생산설비를 조사받고 건설청에 등기하고 전력을 분배 받은 뒤에 동업자단체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방직관련 협회들은 회원기업의 생산능력과 면사 배정량이 대응하여 면사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해야 했다(『紡織界』 25: 19; 38: 26-27; 李怡萱 90).

1952년 1-8월의 면사 배정량을 계산해 보면 중앙신탁국이 대직 생산하는 직포공장에 배정한 면사가 34,247건이었고 면방직협회 등 네 개의 단체를 통해서 배정된 면사가 20,781건이었다. 면사의 총공급량을 62,631건으로 추계하면<sup>15)</sup> 군인과 농어민에게 직접 배정된 면사가 8.6%, 대직공장에 배정된 면사가 54.7%, 네 단체를 통해서 배정된 면사가 33.2%를 차지했다. 위의 네 단체가 배정한 양을 100으로 보고 각각의 비율을 구하면 57.8%, 16.4%, 5.8%, 19.9%였다(『臺灣銀行季刊』 1952년 10월: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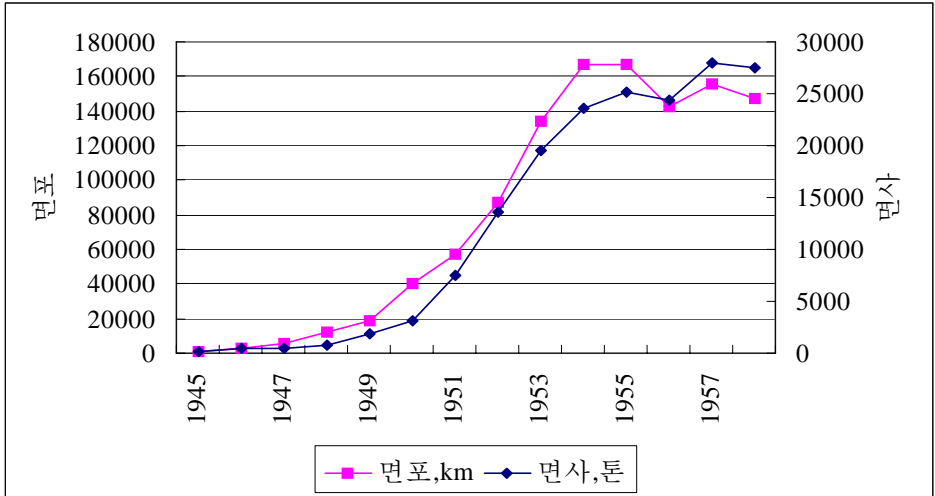
미국의 원조와 대만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대만 면방직공업이 성장했다. <그림 5>에 의하면 1951년부터 면사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아울러 <그림 4>에 의하면 1951년 12월 무렵을 정점으로 해서 면사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1952년 여름에 대만정부는 면사가격이 안정되었다고 판단했고, 1952년 9월에 정부가 「台灣省紗布管理暫行實施辦法」중 통제조치를 취소했으며, 대직제도를 철폐하기로 했다. 그리고 花紗布小組가 면사를 그 수요공장에 경매하기로 했고, 중앙신탁국이 경매를 주관했다. 1952년 9월의 응찰가는 4,200-5,750元 사이였으며 1건 당 500元의 보증금이 필요했다(『紡織界』 33/34: 45). 면방직기업들이 花紗布小組, 건설청, 중앙신탁국에 대직제도를 유지하고 면사경매를 멈출 것, 면포수입을 제한할 것을 요청했고, 면사경매가 면포생산비를 높인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방침을 바꾸지 않았다(李怡萱 2004: 127). 면사 총공급량 가운데 경매되는 면사의 비율이 1952년 9월에는 25%였으나 12월에는 46%로 높아졌다. 나머지 54% 가운데 29%가 군대, 어민, 농민 등에게 판매되었고, 25%가 면방직협회, 메리야스공업협회, 타올공업협

15) 폭이 36인치, 길이가 40야드임.

16) 1950년의 추정 면사수요총량 2,400만 파운드에 2년의 인구증가율을 곱해서 계산했음.

회, 대만성 공업회에 의해 직포공장에 배정되었다(『紡織界』 21: 23; 23: 2; 36: 45). 제도 변경 이전과 비교하면 동업자단체의 역할이 조금 하락했으나 여전히 25%의 면사는 동업자단체를 경유해서 방직기업에게 배정되었던 것이다.

〈그림 5〉 대만의 면사면포 생산량



자료: 黃東之 1956: 141. 蕭峰雄 1982: 175-177.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1967: 46.

대만의 면제품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台灣省紗布管理暫行實施辦法』은 1953년 7월에 완전히 철폐되었다. 이후에는 대만정부와 면방직기업이 면제품의 수출에 관심을 기울였고, 1954년에는 방직제품 수출촉진법이 제정되었다(許惠姍 2003: 101). 1953년까지 수출액이 전무했으나, 1954년에는 35만 달러를 수출하기에 이르렀다(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1967: 125). 그런데 그 법률은 정부가 보조금, 관세, 환율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면제품 수출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규정했고, 면방직관련 동업자단체의 협력을 구하지는 않았다.

이어서 면제품 가격 정책에서 동업자단체의 역할을 살펴보자. 1950년에 대만 방직기업의 면사 총수요가 2,400만 파운드였는데 국내공급은 그 5할에 지나지 않았다(『中國經濟月刊』 1950년 11월: 61). 〈그림 4〉에 의하면 면사가격은 1950년 6월 이후에 급등했다. 20수 면사 1건의 가격이 1950년 7월에 1,980元이었는데 11월에는 4,914元이 되었다. 상승의 원인은 인도의 면사수출 금지, 홍콩과 일본에서의 면사

가격 상승 등이었는데 마지막의 것은 한국전쟁에 크게 기인했다(『臺灣建設』 1호: 30-31).

1950년 9월에 생관회 방직소조는 20수 면사 1건의 가격을 3,000元 이내에서 억제할 방침을 세웠고 그 방침에 면방직공회 및 메리야스공업협회의 협력을 얻으려 했다. 그리하여 그 두 협회에게 생산능력이 인정되는 방직기업에만 면사를 판매할 것, 면사를 구입한 방직기업이 그 면사를 전매하지 못하게 할 것, 홍콩에서 20수 면사 300건과 32수 면사 200건을 수입할 것을 요청했다(『臺灣銀行季刊』 4-1: 256). 앞의 두 시책은 면사가 고가로 거래되는 암시장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1951년 1월에는 생관회 방직소조가 면사가격을 주제로 회의했고, 방직기업에게 시판용 면사 1건의 가격을 5,000-5,300元에 억제할 것을 요청했으며 동의를 얻었다. 아울러 생관회 방직소조는 미원회 방직소조에게 미원회가 지금부터 방직공장과 대방계약을 맺을 때 면사 판매가격에 대한 제한규정을 둘 것과 방직공장이 그것에 따르지 않을 때 대방 계약량을 줄일 것을 요청했다(許惠姍 2003: 51). 가격억제 정책의 성과는 미미했던 듯하다. 면사가격이 매일 상승하여 1951년 6월에는 면사 1건 당 6,000元에 이르렀다(許惠姍 2003: 61). 그렇지만 대방제도의 수정 등 증산정책에는 성과가 있어서 1953-54년에는 수급이 안정되었다.

1955년 2월부터 원면가격 상승 등의 원인으로 면사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다(그림 4). 그리하여 정부가 紡紗委員會와 면사생산 관련 동업자단체들에게 면사공장이 생산하는 면사 중에서 군용과 자가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면사수수 관련 동업자단체들에 공평하게 배정하도록 지시했다. 1955년 3월과 4월에 필요한 면사는 1954년 12월 당시의 가동 면직기 수, 실제생산량, 세금영수증,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배정했고, 5월과 6월분은 현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의 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했다. 7월에는 정부가 「臨時配紗辦法」을 공포했다. 그 내용은 생산된 면사 중에서 방직과 직포를 겸영하는 공장의 자가용 면사 이외에는 중앙신탁국이 구매판매를 통괄하며, 실무적인 일은 면방직협회, 메리야스공업협회, 타올공업협회, 대만성공업회가 담당한다는 것이었다. 1951년까지는 증산을 통한 가격안정을 꾀했으나 이 시기에는 정부가 시장에서의 과당경쟁이 가격상승을 낳는다고 판단했고 면사를 동업자단체를 통해 배정하여 가격을 안정시키려 했던 것인데 이 시기의 가격 억제 정책에는 성과가 있었다.

1956년 2월부터 다시 면사 재고가 증가했고,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1955년

이후에 면제품 가격이 안정되자 정부의 개입은 사라졌다. 그리하여 면방직공회가 증명하면 면사 수요기업이 생산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許惠姍 2003: 117-126).

이어서 면포가격에 대해 살펴보자. 〈그림 5〉에 따르면 1950년부터 면포생산이 크게 증가했다. 약간의 자신감을 얻은 대만정부는 면포를 자급할 목적으로 1951년 4월에 면포 수입을 금지했다(許惠姍 2003: 65). 하지만 대만정부가 생각한 만큼 면포의 국내생산량이 증가하지 않았다. 〈그림 4〉에 의하면 1951년 6월 이후에 면포 가격이 꾸준히 상승했다. 1951년 9월에 대만정부가 도소매 모두에서 최고가격을 설정했으나(李怡萱 2004: 94) 효과는 크지 않았던 듯하다. 〈그림 4〉에 의하면 가격은 1952년 6월 무렵까지는 높은 가격을 유지했다.

그리하여 정부는 생산자의 공동판매장을 개설하게 했다. 대만정부는 대직으로 획득한 면포를 1951년 11월부터 소비자에게 직배했으며 布商業同業公會에게 면포의 가격을 안정시키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같은달에 정부가 면방직협회, 메리야스공업협회, 타올공업협회, 대만성 공업회에게 면포를 최고가격 이내에서 판매하는 공동경영체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그것을 위해 제정된 「四公會聯營處管理辦法」에 의하면 모든 면방직 기업이 가격의 상승기에는 생산량의 50%를, 가격이 안정되어 있을 때는 생산량의 10%를 聯營處에 보내어 판매해야 했고, 그곳의 가격은 시가보다 10% 낮아야 했다. 주된 판매처는 農會, 합작사, 漁會, 상회, 布業公會, 百貨商業同業公會, 공업회였다(李怡萱 2004: 95-96, 110). 〈그림 4〉에 의하면 1952년 6월에서 12월 사이에 면포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그리하여 연영처를 운영하는 네개의 단체가 연영처를 운영하는 비용이 많이 들므로 차후에 면포가격이 다시 상승하면 재개하기로 하고 연영처의 해산을 건의했다. 연영처는 1952년 8월에 해산했다(『臺灣銀行季刊』 1952년 8월: 16). 같은 그림에 의하면 1955년에 면포 가격이 크게 상승했지만 그 이후 연영처가 부활하지는 않았다.

이상을 정부와 동업자단체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대만정부는 대방과 대직 제도를 시행하여 원조면화와 면사가 면제품 증산에 최대한 이용되게 했다. 동업자단체는 대만정부의 증산방침에 협력했고, 생산능력이 충분한 방직기업에게만 면사를 배정했다. 대만정부는 면사가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거래되는 것보다 동업자단체를 경유해서 방직기업에 배정되게 하여 면사가격을 억제했으며, 면제품관련 동업자단체에게 면포의 공동판매소를 설치하고 시세보다

10% 낮은 가격에 판매하게 했다.

### 3. 면제품 수출과 동업자단체

대만은 1950년대 중반부터 수출공업을 육성하기 시작했다. 1954년 7월에는 그 일환으로서 「외국인 투자조례」가 제정되기도 했다. 수출촉진 정책하에서 섬유, 완구, 잡화, 전자제품 제조공업이 성장했으며 대만정부와 기업은 적극적으로 미국 수출을 꾀했다. 면사와 면포의 수출은 특히 빨리 증가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954년에는 불과 35만 달러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 후 1955-61년에 97만, 310만, 278만, 208만, 1,213만, 2,116만, 2,779만 달러로 기복을 보이면서도 꾸준히 증가했다(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1967: 125). 면제품 수출이 1960년대에 급증한 결과로 대만의 면제품 수출은 1962년부터 미국정부에 의해 수출배정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대만정부가 수출배정액을 처음에는 행정적으로 처리했으나 1971년에는 「紡織品出口配額處理辦法」을 제정했다.

그 법에 따르면 수출 배정량은 기본 배정량과 자유 배정량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배정량의 95%가 기본 배정량이었는데 기업의 과거 1년의 실적으로 정해졌다. 자유 배정량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정해졌다. 첫째로 첫째의 자유 배정량은 전체 배정량의 5%이다. 둘째로 조업을 멈춘 공장 및 어떠한 이유에서 이든지 자신의 배정량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공장의 배정량을 국제무역국이 회수하여 자유 배정량에 포함시킨다. 이런 경우에는 자유 배정량이 5%를 초과할 수 있다. 셋째로 그 다음해의 자유 배정량은 직전 연도의 수준을 유지한다. 넷째로 배정량의 공장별 과부족을 국제무역국이 조사하여 배정량을 조정한다. 다섯째로 자유 배정량은 매년 새로이 배정되는데 해외수요가 적은 부문의 자유 배정량은 자유공모로 배정되고 해외수요가 많은 부문의 자유 배정량은 고가품을 수출하는 공장에 배정된다(蕭正堂 1977: 65).

자유 배정량이 점차 증가하도록 제도를 만든 것과 고가품 수출기업이 해외수요가 많은 부문의 자유 배정량을 배정받게 된 제도 등이 면방직 기업의 불만을 일으켰다. 의류제조기업 및 의류수출기업에 대한 1977년의 조사에 의하면 배정과 관련한 법규가 복잡하고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63.8%, 자유배정량 가운데 자신에게 배정되는 양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78.5%였다(蕭正堂 1977: 71-76).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배정량은 1976년에 5%, 1978년에 30%, 1981년에는 49%로 증가했다. 이



에 더해 1984년에는 대만정부가 기본 배정량의 20%를 매년 재분배하는 안을 내기도 했다. 이 제안은 많은 반발을 낳았는데 미국의 수입쿼터가 줄어들면서 시행되지는 못했다(曹淑珍 1995: 70).

수출량 배정제도에 대한 기업의 불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국제무역국은 수출 배정량을 배분하는 권한을 1974년까지 직접 행사했는데 1975년부터 그 방법이 바뀌기 시작했다. 1975년에는 유럽공동시장에 대한 수출품과 1977년에는 미국에 대한 수출품에 대해 수출배정량의 배분과 수출비자의 발급사무를 중화민국 방직업 수출개척회에 위임했다. 국제무역국은 감독하는 것에 머물렀다. 수출품제조 기업들 사이에서의 배정량의 양도와 양수에 관한 사무만은 그 이후에도 국제무역국이 직접 행했다(蕭正堂 1977: 55-56).

한국의 상황은 크게 달랐다. 1965년부터 한국의 섬유수출이 배정량 제도의 적용을 받기 시작했는데 한국정부는 처음부터 정부가 모든 배정량을 배분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1965년도 對美 수출면직물 국내 상사별 쿼터 배정 및 동 쿼터 배정을 위한 수출 사전승인 요령」에 의하면 수출배정량의 5%에 해당하는 면제품이 보세가공 수출협회에 의해 배분되었다. 1966년에는 15%가 보세가공 수출협회에 의해 배분되었다.

1967년에는 원칙적으로 한국면제품수출조합 및 한국보세가공협회가 모든 수출배정량을 배분하고 그 결과를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었다. 한국면제품수출조합은 대한방직협회의 산하단체였다. 1968년에는 위의 두 조합 및 협회에 덧붙여 한국직물수출조합, 한국소모방협회, 한국체타수출조합도 배정량을 회원기업에 배분하기 시작했다. 배정량 배분에 아울러 사후관리도 위의 단체들이 행하게 되었다. 위의 단체들의 업무는 수출계획서의 수합, 배정량만큼 수출하지 못했을 때의 배정량 회수 및 재배정, 수출량이 배정되어 있는 품목에 대한 수출인증, 수출품이 한국에 대한 배정량을 넘지 않았다는 확인서의 발급 등이었다(상공부 商易局 1989).

한국과 대만의 차이는 기계공업에서도 나타났다. 한국정부는 1975년에 자동차 부품의 수입 허가권을 자동차공업 협동조합에 주었으나(오원철 1996: 167), 대만정부는 수입 허가권을 부품공업의 동업자 단체에 주지 않았고 경제부 공업국이 수입 여부를 결정했다(Wade 1990: 282).

IV. 맺음말

필자는 머리말에서 한국과 대만의 동업자단체의 행위를 교섭을 동반한 협력이라고 정의했는데 본문에서의 검토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방직단체의 주요 역할은 한국과 대만에서 유사했다. 한국의 방직단체가 수출증대에 기여했고, 수출쿼타 배정에서 완전한 자율성을 가진 점은 달랐다.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에서는 한국과 대만에 꽤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수출쿼타, 원조면화, 원조면사의 배정에서 잘 나타나는데 한국정부는 동업자단체와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맺었지만, 대만정부는 가능한 한 기업의 직접적인 협력을 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영역에서 동업자단체를 활용했다.

<표 2> 한국과 대만에서 방직단체의 역할 및 정부와의 관계

	한 국	대 만
방직 단체의 주요 역할	증산, 가격안정, 수출증대	증산, 가격안정
증산	면화를 생산능력이 우수한 방직기업에 배정, 생산책임제	면사를 생산능력이 우수한 방직기업에 배정
가격 안정	증산, 방직단체간 직거래, 최고가격	증산, 방직단체를 통한 면사배정, 최고가격
수출증대	수출책임제	없음
수출쿼타 배정	1967년부터 조합이 전체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	1975년부터 조합이 일부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
정부와의 관계	포괄적 협력	제한적 협력
원조면화와 원조면사 배정	방직단체가 독점 매수하여 회원기업에게 배정	방직단체가 원조 면사의 일부를 회원사에게 배정

위와 같은 차이는 두 정부의 경제운영에 대한 사고방식과 그것을 반영한 경제정책의 차이에 기인했다고 생각한다. 제2절에서 언급했지만 국민당 정부는 1927년 이후에 중국대륙에서 경제개발을 꾀했고, 1937년 이후에는 전쟁경제를 운영했다. 즉 경제를 지도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1949년 이후에 대만을 통치하게 되었을 때 정부가 경제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넓었던 것이다. 이승만 정부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했으며 정부가 경제를 개발해야 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박정희 정부는 개발주의적이었지만 이승만 정부 기간에 정부와의 관계 및 방협의 역할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와 역할이 박정희 정부

에서도 계속되었던 것이다.

정부와 동업자단체의 협력이 한국과 대만에 고유한 사태는 아니었다. 일본에 대한 여러 연구도 동업자단체가 정부의 경제정책 집행에 협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橋川武郎 1991; 橋本壽朗 1994; 仙波恒德 1996). 필자의 다른 연구는 1945년 이전의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의 동업자단체가 정부 정책에 협력하며 증산, 수출증대, 품질개선을 추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박섭 2006), 이 글과 결합하면, 동업자단체가 정부의 경제정책에 협력하며 경제성장을 꾀한 것은 동북아시아 국가의 20세기를 관통하는 특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면방직업과 관련된 동업자단체를 검토했는데 다른 동업자단체가 여기에 서 발견된 특질을 반드시 공유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한국과 대만,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적 특질을 구성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 ■ 참 고 문 헌

1. 『京城日報』, 京城日報社.
2. 『경제연감』, 한국은행 조사부.
3. 『경제통계연보』, 한국은행.
4. 『臺灣日日新報』, 臺灣日日新報社.
5. 『臺灣建設』, 臺灣建設出版社.
6. 臺灣總督府 문서.
7. 『臺灣銀行季刊』, 臺灣銀行經濟研究室.
8. 『紡織界』, 紡織界月刊社.
9. 『방협월보』, 대한방직협회.
10. 『釜山日報』, 부산일보사.
11. 『사업보고서』, 대한방직협회.
12. 『이사회 회의록』, 대한방직협회.
13. 『財政經濟月刊』, 財政經濟出版社.
14. 『朝鮮工業組合』, 朝鮮工業組合中央會.

15. 『中國經濟月刊』, 中國經濟月刊社.
16. 『한국통계연감』, 대한민국 통계기획원.
17. 강광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18. 김광석·웨스트팔, 『한국의 외환무역정책』, 한국개발연구원, 1976.
19. 김낙년, “196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과 정부의 역할,” 『경제사학』, 27호, 서울: 경제사학회, 1999.
20. 김양화, “1950년대 제조업 대자본의 자본축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1990.
21. ———, “경제제도와 기업: 1960년대 한국 면방기업들의 사례,” 『사대논문집』, 40호, 부산: 부산대학교, 2001.
22. 김의영, “事業者團體政策變化의 政治: 韓國纖維産業聯合會의 事例를 中心으로,” 『韓國政治學會報』, 32-4, 韓國政治學會, 1998.
23. 김인호, 『태평양전쟁기 조선공업연구』, 신서원, 1998.
24. 대한방직협회, 『방협 십주년 기념지』, 1957.
25. ———, 『방협 30년사』, 1977.
26. 박 섭, “동북아시아 경제에서의 동업자단체의 역할, 1900-60,” 『경제발전연구』, 12권 2호, 한국경제발전학회, 2006.
27. 상공부 商易局, 『섬유쿼터 운용요령, 1963-1989』, 1989.
28. 오원철, 『한국형 경제건설: 엔지니어링 어프로치』, 서울: 기아경제연구소, 1996.
29. 이병인, 『근대상해의 민간단체와 국가』, 창비, 2006.
30. 정광원, “대만경제와 한국경제: 경제개발 및 정책운용 비교,” 한국은행 조사제1부 해외자료실, 1993.
31. 橋本壽朗, “高度經濟成長期における日本政府・業界團體・企業,” 『社會科學研究室』, 45-4, 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室, 1994.
32. 久保亨, “1930年代中國の關稅政策と資本家階級,” 『社會經濟史學』, 社會經濟史學會, 1981.
33. 橋川武郎, “日本における企業集團, 業界團體および政府,” 『經營史學』, 日本經營史學會, 1991.
34. 臺灣日日新報社, 『改訂增補 臺灣六法』, 東京: 綠蔭書房, 1999.
35. 米倉誠一郎, “業界團體の機能,” 岡崎哲二・奥野正寛編, 『現代日本經濟システムの源流』,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1993.
36. 仙波恒徳, “事業者業界團體の機能と行政指導の役割,” 『商經論叢』, 36-4, 九州産業大學, 1996.
37. 小早川九郎, 『朝鮮農業發達史』, 政策編, 1944.
38. 束雲章, “中華民國工商協進會創立經過,” 『工商協進會二十年』, 台北: 工商協進會, 1971.
39. 蕭正堂, 『紡織品出口配額制度下臺灣製衣業發展之研究』, 台北: 國立政治大學企業管理研究所碩士論文, 1977.
40. 蕭峰雄, “產業及技術選擇與工業發展,” 文化大學 經濟學研究所 博士學位論文, 1982.

41. 奥村哲, “恐慌下江浙蠶絲業の再編,” 『東洋史研究』, 37-2, 1978.
42. 隅谷三喜男・劉進慶・徐照彦, 『臺灣の經濟』, 東京大學出版會, 1992.
43. 李怡萱, “台灣綿紡織業政策之研究(1949-53),” 台北: 國立政治大學歷史研究所碩士論文, 2004.
44. 張宗漢, 『光復前臺灣の工業化』, 東京: 交流協會, 2001.
45. 朝鮮織物協會, 『朝鮮における纖維關係團體調査』, 1940.
46. 朝鮮總督府殖産局商工科編, 『朝鮮工業組合令概要』, 朝鮮工業協會, 1939.
47. 曹淑珍, “紡織配額的政治經濟分析,” 台北: 東吳大學政治學系碩士論文, 1995.
48. 竹內庵, “同業組合の歴史的位罫,” 神木哲男, 『近代移行期における經濟發展』, 同文館, 1987.
49. 清川雪彦, “日本織物業における力織機化の進展をめぐって,” 『經濟研究』, 35-2, 岩波書店, 1984.
50. 許惠姍, “進口代替時期臺灣的綿紡織政策(1949-1958),” 台北: 國立政治大學歷史研究所碩士論文, 2003.
51. Chu, Yun-han, “The Realignment of Business-Government Relations and Regime Transition in Taiwan,” Andrew MacIntyre ed., *Business and Government in Industrialising Asi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52.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67.
53. Evans, Peter, *Embedded Autonomy: States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54. Moskowitz, Karl, “Limited Partners: Transitional Alliance between Private Sector and Organizations in the US-Korea Trade Relationship,” Karl Moskowitz ed., *From Patron to Partner: The Development of U.S.-Korean Business and Trade Relations*, Lexington MA: D.C. Heath and Company, 1984.
55. Park, Sub, “The Role of Trade Associations in Northeast Asian Economic Growth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Asia-Pacific Economic and Business History Conference, 12-14, February 2007, University of Sydney, Sydney, Australia.
56. Wade, Robert, *Governing the Market: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Industrializ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57. World Bank, *The East Asian Miracle: Growth and Public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海外經濟協力基金開發問題研究會 畠山, 『東アジアの奇蹟』, 東洋經濟新報社, 1994.

## The Role of Trade Associations in the Korean and Taiwanese Economies, 1950-80

Sub Park\*

### Abstract

The Korean and Taiwanese governments collaborated with the Korean and Taiwanese cotton industry trade associations between 1950 and 1980 for price stability, production increase, and export quota allocation. The Korean government also collaborated for export increase. For price stability, the two governments requested cotton industry trade associations production increase, direct transaction of cotton goods with other trade associations, and direct sales of cotton goods to consumers. To increase production and export, the Korean government even assigned production and export duty. The Taiwanese government ordered trade associations to distribute raw cotton and yarn to companies only with enough production capability.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s well. In the allocation of export quota and raw cotton, the Korean government formed comprehensive cooperation with trade associations. However, the Taiwanese government formed cooperation in the a limited range.

**Key Words:** trade association, Spinners and Weavers Associations of Korea, Taiwan Cotton Spinner's Association, export quota system, economic policy

---

\* Professor, School of Economics and International Trade, Inje University